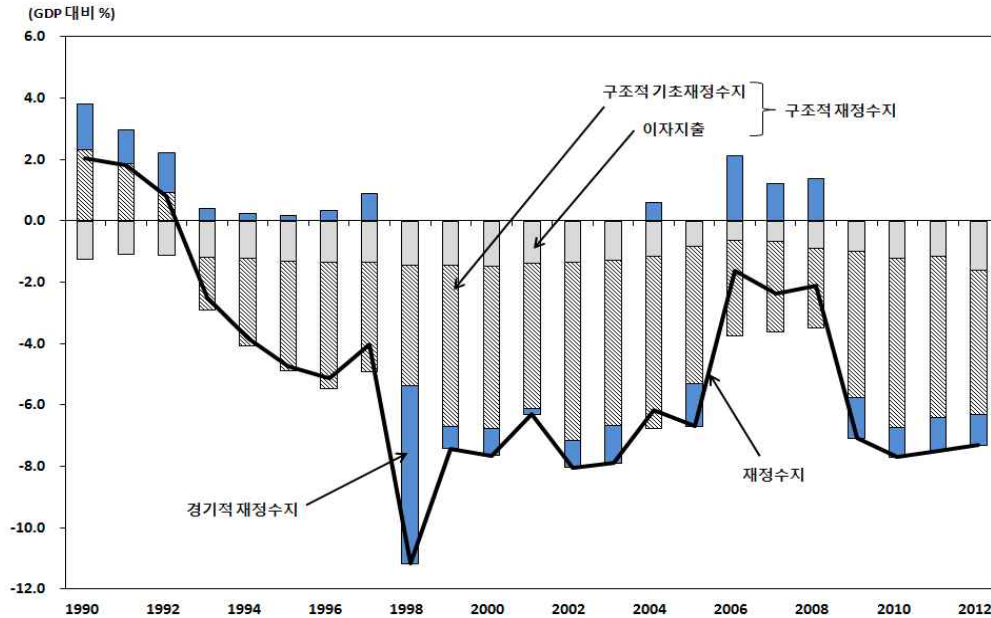


Ⅲ. 일 본

1. 재정추이

-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장기침체로 이후 연평균 5%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를 보여 왔음
 -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거듭된 감세정책과 장기불황 지속으로 인한 세수 감소,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의 확대 및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른 세출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됨
 - 이후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어 2010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7.7%(37.1조엔)을 기록
 - 2008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 악화 요인에 기인하며, 급속한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량적 재정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구조적인 재정 적자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I-1] 일본 재정수지 및 요인분해 추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8, 2010. 11.

-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과거 20년 동안 국가채무는 약 590조엔 정도 증가
 - 이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충당 등을 위해 신규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 및 지방)가 1991년 59%(266조엔)에서 2010년 181%(869조엔)으로 급증
 - 세출 측면에서 1990년대 국가채무의 증가는 주로 경기대책 실시로 인한 공공사업비 증가에 의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에 기인
 - 1992~99년 중 총 9차례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공공사업은 65.5조엔 정도에 달함
 - 과거 20년간 공공사업 및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각각 62조엔, 148조엔 정도에 달함
 - 세입 측면에서는 경기 악화 및 감세조치로 인한 세수감소가 주요인이며 이에 따라 과거 20년간 세수증가 규모는 211조엔 정도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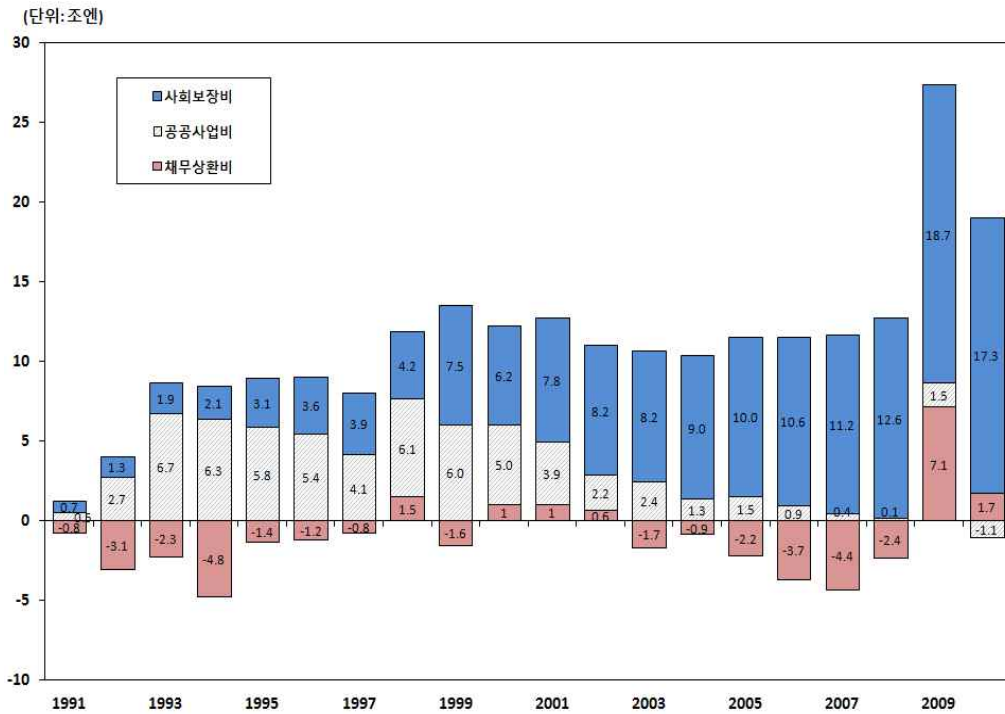
<표 III-1> 중앙 및 지방정부 국가채무 잔고 추이

(단위: 조엔, GDP 대비 %)

구분	1998	2003	2008	2010	2011
중앙정부	390 (58.7)	493 (92.6)	573 (111.0)	668 (134.0)	692 (138.0)
지방정부	163 (32.0)	198 (40.0)	197 (40.0)	200 (42.0)	200 (41.0)
합계	553 (111.0)	692 (140.0)	770 (157.0)	869 (181.0)	892 (1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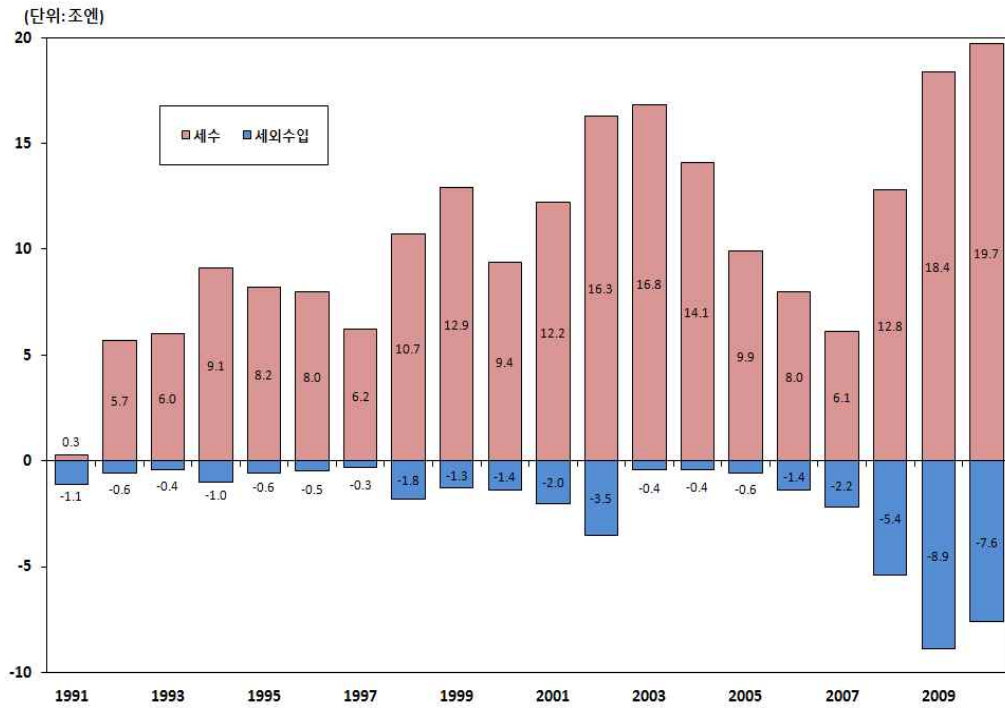
주: () 안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재무성, 『平成23年度予算政府案』, 2010. 12. 24

[그림 III-2] 국가채무 증가요인(세출 측면)



자료: 財務省,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0. 8.

[그림 III-3] 국가채무 증가요인(세입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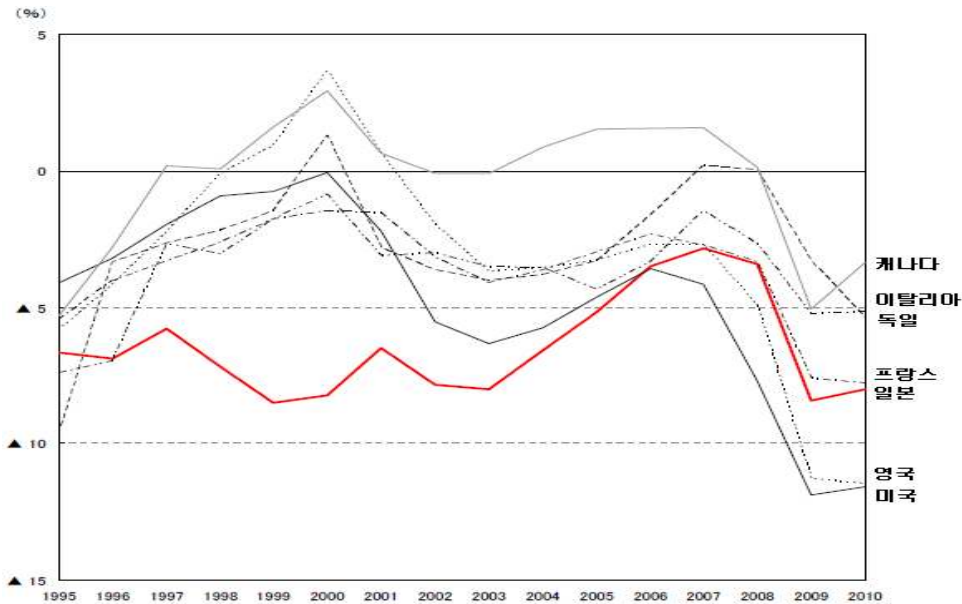


자료: 財務省,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0. 8.

- 국가채무 수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 국내의 높은 국채보유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일본의 국가채무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2009년 123.6%) 및 그리스(2009년 114.9%)보다도 높음
 - 일본정부의 국채금리는 1990년대 말부터 2%를 하회하다가 최근 1%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정부의 국채이자부담은 GDP 대비 1% 수준에 불과
 - 2010년 말 현재 전체 국채잔액 중 국내 금융기관을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보유 비율이 93.6%에 달하는 반면, 해외투자자는 나머지 6.4%에 불과

- 그러나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수요 회복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이 하락할 경우 국채의 국내 소화율이 저하되어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 내재

[그림 III-4]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 추이와 비교



자료: 財務省,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0. 8.

2. 재정건전화 방안

- 고이즈미 내각(2001~2006)은 규제 완화, 민영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 회복에 기여하였으나 재정개혁으로 연결하는 데 실패(GDP 대비 국가채무가 정권 초기 106.1% (538조엔) → 정권 말기 162.9%(823조엔)로 크게 증가)
- 고이즈미 정권은 2006년 7월 경제성장과 더불어 재정개혁 목표를 담은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기본방침 2006」)³⁾ 발표

3)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은 경제재정자문회의가 2001년 6월 처음으로 결정한 당면 경제정책운영방안을 말하며 2009년까지 매년 6월 개정되었음

- ‘경제재정자문회의’⁴⁾를 통해 경제와 재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개혁해 나갈 것으로
써, ‘성장력 강화와 재정건전화의 양립’ 구현
- ‘세출·세입 일체개혁’을 선언하고 2011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및 2010년
대 중반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인하를 목표로 추진
- 재정건전화 목표는 제Ⅱ기와 제Ⅲ기로 나누어 2단계로 추진
 - 1단계 전략(제Ⅱ기)은 2011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필요 재원
16.5조엔을 세출 삭감 및 증세를 통해 조달
 - 2011년까지 사회보장, 인건비, 공공투자, 기타 분야에서 11.4조~14.3조엔 세출
삭감, 나머지 2.2조~5.1조엔은 세계개혁에 의한 세수 증대를 통해 조달
 - 2단계 전략(제Ⅲ기)은 201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감소시키는 전략을 추진
- 재정건전화 제Ⅱ기와 제Ⅲ기를 아래 원칙과 논의방침에 따라 일관적으로, 세출과
세입 양쪽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
 - 원칙 1 : 철저한 정부 축소로(세출 삭감, 자산 매각, 특별회계 개혁 등) 국민부담
증가를 최소화
 - 원칙 2 : 잠재성장력 강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재정건전화에 활용
 - 원칙 3 : 명확한 우선순위를 통해 성역 없는 세출 삭감 실시
 - 원칙 4 : 중앙·지방간의 균형 잡힌 재정건전화의 실현을 향해 협력
 - 원칙 5 :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의 1/2로의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하여 사회
보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
 - 원칙 6 : 최대한 자산채무를 감소, 자산매각 수입은 원칙적으로 채무상환에 충당
하여 채무잔액을 줄이고, 적절한 국채관리 정책을 추진
 - 원칙 7 : 신규 국민부담은 정부의 비대화에 사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환원

4) 2001년 제2차 모리 내각의 중앙기관 재편에서 내각부와 같이 설립되었으며, 각료 및 학계, 재계인사
들로 구성됐으며 경제재정 및 예산편성의 기본구조를 마련하는 수상의 자문기관 역할을 담당.

- 특히 고이즈미 정권에서는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며 예산편성과정 개혁, 삼위일체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였으나 이후 2010년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됨

<표 III-2> 단계별 재정건전화 목표

시 기	주요 내용
제 I 기 (2001~06년)	-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는 방침하에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민간주도의 경기회복을 실현함과 동시에 기초재정수지의 대폭적인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둠
제 II 기 (2007~10년대 초반)	-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확실하게 실현하는 시기 · 2011년도에는 중앙·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를 확실히 흑자화 · 재정상황이 심각한 중앙정부의 기초재정수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세출 삭감을 행하면서 세입의 일반재원의 소요 총액을 확보함으로써 흑자 기조 유지
제 III 기 (2010년대 초반~중반)	- GDP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을 낮추는 시기 · GDP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춤 ·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GDP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 內閣府, 「經濟財政運營と構造改革に關する基本方針 2006」, 2006. 7.

- 이후 아베(2006~2007) 및 후쿠다(2007~2008) 내각은 고이즈미 내각의 「기본방침 2006」에 따른 기본적인 재정건전화 목표 및 방향을 그대로 추종
 - 그러나 아소(2008~2009) 내각은 2009년 6월 고이즈미 정권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악화를 이유로 포기
- 아소 정권은 2008년 12월 ‘중복지·중부담’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구축을 위해 중기 재원 확보 방안인 「중기 프로그램」을 발표
 - 세계경제의 혼란에서 3년 이내의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양질의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한 ‘중복지·중부담’의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의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실시한다는 계획
 - 특히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되는 재원은 전액 사회보장비용에 충당하여 모두 국민들에게 환원시킬 계획

- (소비세율 인상) 내각부 산하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시산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해 대폭적인 소비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
- 하토야마(2009~2010) 내각은 낭비적 예산의 삭감 등을 위해 ‘행정쇄신회의’⁵⁾ 주관하에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구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개혁을 단행
 - ‘행정쇄신회의’는 기존 사업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필요성, 타당성, 유효성 등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
 - 해당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단가 설정 및 실시방법 등을 검토
 - 특별회계의 고유재원에 의해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사업과 비교하여 과다 여부 등을 판정
 - 독립행정법인 등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시 자체재원 조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등
- 간(2010~현재) 내각은 2010년 6월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의 달성을 위해 재정건전화의 기본 방침을 담은 「재정운영전략」을 발표⁶⁾
 - 일본정부는 2010년 6월 「신성장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평균 명목 및 실질성장률을 각각 3%, 2% 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
 - 동 전략은 중장기 재정건전화 목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규율, 그리고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친 중기재정 프레임으로 구성
 - 2011년부터 3년 동안 세출 및 국채발행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

5) 민주당 신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포함한 행정진반에 대한 쇄신과 함께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쇄신회의’를 신설

6) 현재 추진 상황은 ‘<참고 1> 「재정운영전략」의 항목별 추진 내용’을 참조

<표 III-3> 「재정운영전략」의 재정건전화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수지(flow)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2015년까지 GDP 대비 적자비율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20년까지 흑자 전환 - 2021년 이후에도 국가채무 잔액 목표의 달성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
잔고(stock)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이후 중앙·지방의 GDP 대비 장기채무 수준을 현 181%에서 안정적으로 인하

자료: 國家戰略室, 「財政運營戰略」, 2010. 6.

○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재정운영은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을 기본으로 함

<표 III-4> 「재정운영전략」상 재정운영의 5대 원칙

구 분	주요 내용
재원확보 원칙 (「PAYGO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의 도입 시에는 소요되는 재정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원칙으로 함
재정적자 감축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수지 목표를 위해 국채발행액 감축, 기초 재정수지 개선, 국채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조치 등을 통해 매년 재정상황이 개선되도록 예산편성
구조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의료 및 개호(노인들만을 위한 보험제도)의 급부 등 사회보장 경비와 같은 구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를 고려한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
세출 재검토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세출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의 필요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세출을 철저히 배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상호협력하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자료: 國家戰略室, 「財政運營戰略」, 2010. 6.

○ (중기 재정 프레임) 2011년부터 3년간 시행할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7)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구분	주요 내용
국채발행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의 신규 국채발행액은 2010년 예산수준인 약 44조엔을 초과하지 않도록 억제 - 부채 감축을 위해 그 이후의 신규 국채발행액도 억제할 계획
세입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필요한 세입을 확보 - 조세특별조치는 2010년 세제개정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새로운 세제상의 조치는 그에 알맞은 신규 재원을 확보하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세출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2013년에는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에 준하여 항구적인 세출 삭감을 실시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의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규모(이를 「세출의 큰 범위」라 함, 71조엔)를 실질적으로 웃돌지 않도록 함 - 2011년 이후의 「경제위기 대응·지역 활성화 예비비」 1조엔에 대해서는 경기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 - 세출증가로 이어지는 정책을 새롭게 실시하거나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올해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의 규모가 「세출의 큰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다른 부분의 세출 삭감을 통해 재원조달

자료: 國家戰略室, 「財政運營戰略」, 2010. 6.

○ 중기 재정 프레임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편성

-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나 경비의 성격에 유의하면서 중기 재정 프레임과 정합적인 개산요구 범위를 각 부처별로 설정
- 또한 각 부서는 ‘신성장전략’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근거로 하여 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도록 예산을 편성
- 요구 후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각 각료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다시 검토하여 세출을 삭감

7) 단년도 예산주의가 갖는 경직적 세출 계획이나 예산의 이월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을 예산 주기로 설정한 다음, 해당 기간 내의 재정운영 방침을 제시

○ 중기재정전략의 개정

- 2011년 하반기 무렵, 당면한 경제전망이나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중기재정전략 개정을 실시하여 2012~2014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중기재정 전략을 설정
- 매년 중반 무렵, 다음 연도 이후 3년간의 새로운 중기재정전략을 수립
- 매년 책정한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개선요구 및 예산편성을 실시

□ 지난 20년간 일본정부가 책정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잠시 성과를 거두긴 하였으나 장기침체 지속 및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악화로 인해 모두 실패

-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은 재정구조개혁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구조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로 재정개혁을 철회
- 이후 고이즈미 정권의 재정개혁으로 기초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중은 2002년 -7.1%에서 2008년 -3.5%로 빠르게 개선
- 그러나 2006년 고이즈미 내각도 「기본방침 2006」을 통해 재정구조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출증대에 대한 압박으로 좌절

□ 최근 「재정운영전략」 발표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 전략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이번 재정건전화 목표는 2006년 고이즈미 내각의 목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목표 달성 시기만 지연시킨 것이어서 정책적 차별성이 떨어짐
- 「중기 재정 프레임」 중 세입확보 및 세출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않아 이행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
-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중 재정규율로서 'PAYGO 원칙' 준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일본경제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
 - PAYGO 원칙은 경기악화에 따른 세출증가 압력으로 쉽게 파기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소임을 감안할 때 동 원칙 적용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재정운영전략의 핵심 지표인 기초재정수지는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시
국채상환부담이 급증할 경우 동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결국 채무의 현상 유
지만을 의미
-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한계 노정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 2008년 12월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중기 재원 확보를 위해 발표된 「중기
프로그램」의 핵심인 소비세율 인상 등은 여전히 논의 중
- 2010년 6월 발표한 「재정운영전략」 내용 중 ‘중기 재정 프레임’에 따르면 세입 측면에서
세제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을 강조
- 자세한 내용은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참조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FY2011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감소분 충당을 위해 고
소득층의 세금 공제 축소 등의 증세 조치를 병행
- 이외에 조세특별조치 항목 정비, 환경세 인상 등으로 1.4조엔의 재원 확보
- 간 나타오 총리는 6월 17일, 참의원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밝힘
-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5%이며 이 가운데 1%포인트의 세수는 지방에 배분, 국가에
귀속되는 나머지 4%포인트의 세수는 기초연금과 노인 의료·요양 등 사회보장 분
야에만 투입하도록 1999년 예산총칙에서 규정

- 일본은 소비세율을 지난 1997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 이후 계속 이 수준을 고수하고 있음
- 간 총리는 현재 소비세 수준이 10조엔 정도가 부족한데다 사회보장비는 해마다 자연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
- 그러나 지난 7월 11일, 민주당은 ‘소비세 역풍’을 맞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주당은 연내 소비세 인상안 비준을 포기한다고 밝힘
- 민주당은 작년 8. 30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은 4년간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여론 악화

<표 III-6>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십억엔)

개정사항	규모
1. 법인세 : 감가상각제도, 조세특별조치 항목 정비 등	610.2
(1) 과세기반 확대: 감가상각제도 및 결손금 이월제도 재검토 등	584.9
(2) 조세특별조치 항목의 정비	21.9
(3) 의료용기기 등의 특별상각제도의 재검토 등	3.4
2. 개인소득세: 급여소득 및 부양공제, 퇴직소득과세 등의 재검토 등	247.3
3. 재산세	297.1
(1) 상속세 기초공제 인하	235.5
(2) 상속세 세율(최고세율 50%→55% 인상) 재검토 등	61.6
4. 소비세: 환경세 등 인상	246.1
합 계	1,400.7

자료: 財務省, 「平成23年度 税制改正(内國稅關係)による増減収見込額」, 2010. 12. 16.

2)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2008년 12월 발표된 「중기 프로그램」의 핵심인 소비세율 인상 등은 여전히 논의중

- 2010년 6월 발표한 「재정운영전략」 내용 중 ‘중기 재정 프레임’에 따르면 향후 신규 국채발행 억제, PAYGO 원칙 도입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표 III-4> 「재정운영전략」상 재정운영의 5대 원칙’ 및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참조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 고이즈미 내각의 「기본방침 2006」에 의거하여 이후 아소정권까지 매년 세출개혁을 천명하였으나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세출 삭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침
 - 현재 일본정부가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세출 삭감 조치는 하토야마 정권에서부터 실시된 「재정사업구분」이 전부임

- 「재정운영전략」(2010. 6) 중 ‘중기 재정 프레임’에 따르면 세출 측면에서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에 준하여 항구적인 세출 삭감 등을 실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참조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FY2010 예산안부터 ‘행정쇄신회의’의 「사업구분」 평가 및 종합 검토에 따라 세출 삭감 및 세입 확보
 - FY2010 예산편성 시 약 3.3조엔의 재원 확보

- 부처가 제출한 329개 사업의 예산요구안을 검토하여 예산요구 단계부터 9,692억엔의 세출 삭감
 - 독립행정법인·공공법인의 기금 국고반납,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1조 269억엔의 세입을 확보
 - 부처 예산요구단계에서의 세출 삭감을 통해 1조 3,122억엔의 재원 마련
- FY2011 예산편성 시에는 3,515억엔의 세출 삭감과 1조 3,984억엔의 세입확보로 약 1.7조엔의 재원을 마련

- FY2011 예산안편성 시 「재정운영전략」에 따라 2011년~2013년의 중장기 세출예산안이 포함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2013년에는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에 준하여 항구적 세출 삭감을 실시
 - 전년도 당초 예산의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 규모(이를 「세출의 큰 범위」라고 함, 71조엔)를 실질적으로 넘지 않도록 억제

<표 III-7> 2011~2013년도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

(단위: 조엔)

구분	2010	세출의 큰 범위		
		2011	2012	2013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	70.9	71	71	71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예비비	1.0	1.0	1.0	1.0

자료: 財務省, 「財政運營戰略」, 2010. 6. 22

2)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2010년 6월 발표한 「재정운영전략」 내용 중 ‘중기 재정 프레임’에 따르면 향후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에 준하여 항구적 세출 삭감, PAYGO 원칙 도입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표 III-4> 「재정운영전략」상 재정운영의 5대 원칙’ 및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참조

<참고 1> 「재정운영전략」의 항목별 추진 내용(2011년 1월 현재)

구 분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 목표(내각부 시산결과)	
(1) 수지(flow) 목표	
① 중앙·지방 기초재정수지	- FY2011 중앙·지방 기초재정수지(GDP 대비)는 전년 대비 0.9%p 향상될 전망 - FY2015 및 FY2020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지개선폭은 각각1.0%p, 4.2%p
② 기초재정수지	- FY2011 기초재정수지(GDP 대비)는 전년 대비 0.9%p 향상될 전망 - 2015년도 및 2020년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지개선폭은 각각1.5%p, 4.6%p
(2) 잔고(stock) 목표	- 2011년 국가채무는 전년(174%) 대비 177%로 악화될 전망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PAYGO 원칙	- (FY2011 예산안) 법인세 감세에 따라 증세조치 병행
재정적자 감축 원칙	- (FY2011 예산안) 전년 대비 신규 국채발행 및 국채의존도 감소 - 기초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상기 시산결과와 같으나 향후 불확실한 요소 증가에 따라 신중한 조치 필요
구조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 현재 사회보험서비스는 대부분 특례채권에 의존 -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1/2 유지는 여전히 문제
세출 재검토의 원칙	- (FY2011 예산안) 편성 시 ‘재편성 기준’ 및 ‘사업구분’에 따라 예산요구 시 2.5조엔의 세출 삭감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 (FY2011 예산안) 지방 일반재원 총액의 확보, ‘지역자율전략 교부금(가칭)’의 창설 등을 동 원칙에 따라 실시
중기 재정 프레임	
(1) 국채발행규모 억제	- FY2011 신규 국채발행액은 전년(44조 2,030억엔)수준을 하회하는 44조 2,980억엔
(2) 세입 측면	-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추진에 대하여’(2010. 12)에 근거하여 올해 중반까지 사회보장개혁방안 및 세제개혁안을 준비
(3) 세출 측면	-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전년(70조 9,319억엔) 수준을 하회하는 70조 8,625억엔 -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관련 일반재원 총액은 59조 4,990억엔으로 전년(59조엔 4,103억엔)과 비슷한 수준

<참고 2> 2002~2009년 일본의 재정건전화 정책

구 분	「구조개혁 및 경제재정의 중기전망」 (2002. 1. 25)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6」 (2006. 7. 7)	
본문 및 관련 지표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등	<p>【효율적·지속가능한 재정으로의 전환】 2010년초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의 증점화,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 행정사업의 효율화, PFI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구조개혁 추진을 통하여 세출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세출 억제 실시 - 중앙 및 지방의 이러한 대처를 통해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 - 「개혁과 전망」 기간 동안 정부규모(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규모)는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 	<p>【재정건전화 제Ⅱ기('07~'10년초) 제Ⅰ기('01~'06)와 유사한 정도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고 2011년도에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한 기초재정수지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중앙 및 지방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을 추진 -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과 함께 세출억제를 기본으로 세출 삭감을 단행하고, 수입 측면에서는 일반재원의 소요총액을 확보하여 흑자기조를 유지 <p>【재정건전화 제Ⅲ기('10년초~'10년 중반) 기초재정수지의 흑자화를 달성한 후, 중앙 및 지방에서 수치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일정한 흑자 폭 확보</p>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t년도, %)	-4.3 (2001년도)	-3.3 (2005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t+1년도, %)	-3.8 (2002년도)	-2.8 (2006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의 안정적 인하	<p>「개혁과 전망」 대상기간 이후에도 그 기간과 동일한 정도의 재정수지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민간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계속된다고 전제하면 2010년 초 기초재정수지가 흑자화될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의 동향도 금리 안정이 계속되면 비슷한 시기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 	<p>【재정건전화 제Ⅲ기(2010초~2010년중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의 증가 억제 및 안정적 인하를 확보</p>
	기간	5년(2002년도~2006년도)	-
자산 결과 등	대상기간	2001년도~2006년도, 2010년도	※ 「향후 5년간 세출개혁」의 개요
	자산의 전제	<p>기초연금국고부담이 1/2과 1/3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지출: -3% - 인건비: 인원수 -0.5% - 사회보장비용: 의료제도개혁(2001. 11. 29) - 물건비: -1% - 기타 일반세출: 물가상승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2011년까지 - 재정건전화를 전제한 명목성장률 3% - 5년간 중앙 및 지방의 세출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1.6조엔 · 공공투자: -5.6~ -3.9조엔 · 기타: -4.5~ -3.3조엔 · 합계: -14.3~ -11.4조엔 - 목표달성을 위한 규모(16.5조엔)과 세출 삭감에 의한 규모의 차이에 대해서는 세제개혁으로 대응
	최종연도의 명목GDP 성장률(%)	3.0 (2010년도) (기초연금국고부담 1/2 전제)	
	최종연도의 실질GDP 성장률(%)	1.9 (2010년도) (기초연금국고부담 1/2 전제)	
	(명목)t년도 실적/전망	-2.4 (2001년도)	1.9 (2005년도)
(참고) GDP 성장률	(명목)t+1년도 전망	-0.9 (2002년도)	2.2 (2006년도)
	(실질)t년도 실적/전망	-1.0 (2001년도)	3.2 (2005년도)
	(실질)t+1년도 전망	0.0 (2002년도)	2.1 (2006년도)

<참고 2> 2002~2009년 일본의 재정건전화 정책 <계속>

구 분		「경제재정 중장기방침의 10년 전망」 (2009. 1. 19)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9」 (2009. 6. 23)
본문 및 관련 지표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등	<p>【기초재정수지의 동향】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악화로 경제 및 세입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까지 흑자화 달성의 전제가 되었던 세입개혁은 사회보장과 세입의 일체적 개혁 등을 검토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향후 「중기프로그램」에 따라 2010년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행 -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수지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당초 2011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상황에 있음 	<p>【재정건전화 목표】 10년 내에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 최고 수준의 국가채무 및 이자 비용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균형을 목표로 하여 수지개선 노력을 지속 - 경제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먼저 경기를 회복시켜 5년 이내에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경기대책의 부문 제외)의 GDP 대비 비율을 반감시키는 것을 목표 <p>【재정건전화와 안심사회 실현】 「중기프로그램」과 「2009년도 세계개정」을 통해 세계의 발본개혁을 실시하고 사회보장기능의 강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구체화해 나감</p>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t년도, %)	-3.4 (2008년도)	-3.9 (2008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t+1년도, %)	-4.2 (2009년도)	-8.1 (2009년도) (경기대책 제외 시 -5.7)
	GDP 대비 국가채무의 안정적 인하	<p>중앙 및 지방의 GDP 대비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인하를 확보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극히 중요한 준칙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카이세대가 모두 연금수급자가 되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절한 경제재정운영을 해나갈 것임 	<p>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목표로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10년대 중반에 걸쳐 적어도 안정시키고 2020년대 초까지 안정적으로 인하</p>
	기간	향후 10년 정도	-
자산 결과 등	대상기간	2008년도~2018년도	2008년도~2023년도
	자산의 전제	<p>【비교자산】 「기본방침2006」에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순조회복/침체지속/급회복 - (사회보장) 사회보장기능 강화/기초연금국고 부담 1/2 + 자연증가 - (소비세) 유지/인상(3~7%) - (세출) -14.3조엔 삭감+비사회보장지출 유지/-11.4조엔 삭감+비사회보장세출 증가(물가상승률) 	<p>【중장기적 자산】</p> <p>좌동</p>
	최종연도의 명목GDP 성장률(%)	1.3~2.9~4.1 (2018년도) (시나리오별 전제)	1.2~3.3~4.2 (2023년도) (시나리오별 전제)
	최종연도의 실질GDP 성장률(%)	0.6~1.2~2.2 (2018년도) (시나리오별 전제)	0.7~1.2~1.9 (2023년도) (시나리오별 전제)
	(명목)t년도 실적/전망	-1.3 (2008년도)	-3.6 (2008년도)
(참고) GDP 성장률	(명목)t+1년도 전망	0.1 (2009년도)	-3.0 (2009년도)
	(실질)t년도 실적/전망	-0.8 (2009년도)	-3.3 (2008년도)
	(실질)t+1년도 전망	0.0 (2009년도)	-3.3 (2009년도)